

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책임 인정

손배소송서 국가의 법적 책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 추진 이철성 청장 유족 대면사과 검토...유족측 “진정성 있으면 수용”

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경찰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씨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에 대해 백씨 유족측은 “진정성 있는 사과라면 받아들일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백씨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청구인락은 원고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의사를 피고 측이 재판부에 밝히는 법적 행위를 뜻한다.

보성군 웅치면에서 농사를 짓던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

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백씨 유족은 지난해 3월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총경, 한보 경장, 최보 경장 등을 상대로 총 2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살수차 요원으로 이번 소송 피고인 한·최 경장은 지난해 재판부에 제출한 청구인락서에서 백씨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유족에게 사죄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청구인락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소속 기관인 경찰청이 시기 등을 이유로 제출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청이 살수차 요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고, 진행 과정에서 청구인락을 제지한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며 “백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사소송에서 국가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피고인 법무부와 국가 청구인락 추진을 협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상대 소송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이번 사안에 실제 관련된 국가기관은 경찰청이므로 법무부와 적극 협의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장이 백씨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는 시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찰은 이철성 청장이 유족에게 대면 사과할 기회를 만들어 유족 측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지난 6월 경찰개혁위 출범식에서 백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나 아직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아울러 백씨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수행할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와 민·형사재판에 적극 협조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등 후속조치를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을 대변하고 있는 정현찬 백남기 투쟁본부 공동대표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국가의 책임 인정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족과 함께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철성 청장이 직접 찾아와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와 어떤 처분이라도 달리 받았다 고 한다면 사과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협뉴스

광주지검 “조폭 모이기만 해도 엄벌”

조직폭력 재개 움직임에 구속 수사 등 고강도 처벌 경찰과 핫라인 설치 등 협조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양부남)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조직폭력배를 엄단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앞으로 조폭들이 공공장소에 모여 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더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지검은 실제 최근 폭력 등은 없었지만,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도심에 집결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조직폭력배들을 구속수사하는 등 조폭에 대해서 만큼은 고강도 처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검이 이처럼 조폭범죄에 엄중한 해결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한때 사라진 듯했던 조폭들이 이른바 광주 3대 폭력조직으로 불리는 ‘무등산파’를 중심으로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12일 “A씨 등 ‘무등산파’ 폭력조직원 3명을 폭력조직 간 보복범죄에 가담한 혐

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무등산파’ 조직원들이 다른 폭력조직인 ‘국제1파’ 조직원들에게 폭행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광주의 한 지역에 집결한 혐의다.

광주지검은 앞서 지난달에도 무장한 상태로 광주도심에 집결한 ‘총장오빠파’ 조직원 등 조폭 20명을 적발해 9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2명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폭들이 단체로 집결 이후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보복 폭행 등 특정 범죄목적에 의해 모였더라면 범죄행위가 성립한다”면서 “특히 조폭들이 흉기 등을 몸에 품어 지니지 않았더라도, 도심에 단체로 모여 위력을 과시하거나 시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경우에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검은 광주경찰청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조직폭력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분기별 실무자 회의와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삼남매 학대 계부·친모 징역

삼남매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와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이중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아내 B(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11~17살 삼남매의 계부와 친모인 이들은 지난 3~5월 11살 막내아들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집에서 내쫓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혐의다. 특히 계부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욕설과 함께 삼남매를 수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자녀의 건전한 신체·정신적 발달에 큰 지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취업우세가 궁금해 호남대학교 IT스퀘어 광장에서 12일 열린 ‘2017 JOB FESTIVAL’에서 학생들이 타로 부스를 찾아 취업우세를 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도로공사, KT&G 등 공기업과 금융, IT업계 등 11개 기업이 참여해 최신 채용 동향 등 취업정보를 제공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보건환경연 특혜 의혹 수사 속도

전남경찰이 전남도 유관기관에서 불거진 특혜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전남경찰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순천경찰서는 전남테크노파크의 태양 광발전 임대사업이 ‘밀어주기식’으로 이뤄진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테크노파크 원장, 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업체 선정은 물론 계약 규모가 커진 과정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의자들을 소환한 뒤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도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건환경연구원 분원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에서 특정 업체와 사전 결탁한 혐의(임찰방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사전에 업체를 내정하고 2억4000만원 규모 설계 임찰을 ‘짜맞추기식’으로 진행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보건환경연구원을 압수수색 했으며 이후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파악했다.

실무자에서 원장까지 관련자들에게 대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소환 대상이나 규모는 바뀔 수도 있다”며 “소환조사를 거쳐 다음달내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법무부 “광주교도소 5·18 암매장 발굴 조사 긍정 검토”

5·18재단, 담당자와 실무 회의
“국감 기간 중 답변주겠다” 약속

옛 광주교도소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 암매장 발굴조사(광주일보 9월29일자 6면)가 애초 유보적이었던 법무부의 긍정적 입장 변화로 탄력을 받게 됐다.

1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김양래 재단 상임이사와 광주시 관계자 등은

법무부 담당자와 만나 옛 광주교도소 일대 발굴 조사 관련 실무자 회의를 진행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이번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이르면 다음주 국정감사 기간 중 허가에 관한 답변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발굴 방법 등 구체적 계획, 행방불명자 유족 동의 확보 등이 다뤄졌다.

법무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발굴 과정에서 유골 훼손 여부다. 재단은 “지역

문화재 발굴 전문가들이 발굴에 참여한 다”며 우려를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행방불명자 유족 동의 부분과 관련, 재단은 광주시가 인정한 행방불명자 대부분이 유족회원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5·18 당시 광주교도소 재소자 증언과 교도소에 주둔했던 3공수여단 부대원이 남긴 암매장 관련 메모(약도)를 확보, 발굴 조사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발굴 대상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법무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 대해 법무부측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 국회 계류’ 등을 이유로 허가 보류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고됐었다.

김양래 상임이사는 “이번 회의는 재단·단체가 암매장지 발굴조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자리로, 법무부가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암매장지로 유력한 옛 광주교도소를 시작으로 광주시 동구 제2수원지 인근과 광주~화순간 너릿재 인근 등도 올해 내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가출생활 일행 2명이 차 훔쳐 사고 내자 감금·폭행한 가출남녀들

○ 함께 가출 생활을 하던 일행이 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사고를 내자 속소에 이를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가출 청소년 일당이 경찰서행.

○ 12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에 따르면 A(19)양 등 남녀 8명은 지난 10일 새벽 1시에 속소로 지내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빌라에서 B(16)양 등 2명을 48시간 가둬놓고 폭행했다는 것.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최 선 규 H. 010-3605-5000